

# 3.1운동에 대한 기억투쟁의 준거로서 '민족'과 '민족주의' 재고

양 현 혜\*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근대적 민족 정체성의 시원(始原)으로서 3.1운동
- III. 함석헌의 3.1운동 기억
- IV. 『도쿄아사히신문』의 3.1운동 기억
- V. 해방 이후 남한의 3.1운동 기억
- VI. 해방 이후 북한의 3.1운동 기억
- VII. 나가며

**국문초록** |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전후하여 3.1운동에 관한 다양한 기억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근래의 3.1운동 기억 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민족' 혹은 '민족주의'가 더 이상 전면에 부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3.1운동 연구에 대한 인식론적 토대가 1980년대 이전까지의 반공적이고 보수적인 민족주의, 1980년대 이후 민중의 주체성을 중심에 둔 민족주의, 2000년대 이후 탈민족주의로 점차 변화해왔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여전히 민족 또는 민족주의라는 준거를 중심으로 3.1운동의 기억투쟁을 재검토하는 것이 민족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해보는 데에 더욱 생산적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고는 크게 네 가지 3.1운동의 기억들을 살펴본다. 여기서 네 가지 기억이란 일제강점기 함석헌의

\* 梁賢惠,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yanghh@ewha.ac.kr

투고일: 2021. 11. 09. 심사완료일: 2021. 12. 12. 게재확정일: 2021. 12. 21.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1..147>

3.1운동 인식,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의 3.1운동 보도, 해방 이후 남북한의 교과서에 나타난 3.1운동에 대한 공식기억 등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3.1운동의 기억을 탈민족화하거나, 3.1운동의 기억 속에서 민족주의보다 더욱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대 담론만을 소환하거나, 혹은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기억들을 발굴하는 데에만 전념하는 것이 반드시 능사는 아닐 수 있으며, 100주년 이후로도 지속될 앞으로의 3.1운동의 기억투쟁에서 ‘민족’이라는 준거가 쉽게 제외되는 흐름 또한 오늘날 우리가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할 선택적 기억과 망각의 조건은 아닌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핵심어** | 3.1운동, 기억투쟁, 민족과 민족주의, 함석헌, 『도쿄아사히신문』, 남북한 역사 교과서

## I. 들어가며

역사는 기록하는 힘과 이를 소환해 기억하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남겨진 기록과 이를 기억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어떠한 역사도 남지 않을 것이다. 과거를 소환하는 자는 자신의 시대가 제기하는 문제와 씨름하며 과거에서 무언가를 길어 올리고 기념하고 애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과 ‘기념’과 ‘역사’는 상호구성적이고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 반면, 공식적인 기억으로서 ‘역사’로부터 배제된 ‘기억들’도 존재함을 인식할 때, 역사는 돌연 치열한 현재적 ‘투쟁’ 혹은 ‘기억 전쟁’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억’, ‘기념’, ‘역사’ 간의 유기적 관계는 2000년대 이후 역사학에서 기억 연구라는 흐름을 활발하게 추동했다. 다양한 이론적 주장과 사례연구가 축적되었지만, 기억 연구의 근간에는 과거의 편린과 미완의 과제를 당대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겨안으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sup>1)</sup>

---

1) 기억 연구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 성과와 담론으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억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5; 문화사학회 엮음, 『기억은 역사를 어떻게 재현하는가』, 한울, 2017; 최호근, 『기념의

한국근현대사에서 이러한 기억투쟁이 전개된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3.1독립운동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인들은 3.1운동을 통해 스스로를 역사의 집단적 주체인 ‘민족’으로서 자각하게 됨으로써 그 정치적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3.1운동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의 당대적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은 이 사건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공적으로 기념할 수 없었다. 일제 식민당국은 3.1운동을 ‘소요사태’ 또는 ‘폭동’으로 간주하면서 소수의 인사들이 국제 정세를 오판하여 벌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공식적’인 해석 이외의 서사를 철저하게 탄압했다. 3.1운동의 의미를 가장 강조하던 『동아일보』조차 3.1운동 관련자 49인의 재판 경과를 소개하거나 해외의 3.1운동 기념 활동에 관한 소식을 기사화하는 수준 이상으로 이 운동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없었다. 또한 문화통치 기간 중 이론적으로 상당히 급진적인 글들이 소개되던 지면에서도 유독 3.1운동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재조명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한 일제 식민당국의 우려가 얼마나 컸는지를 방증한다.<sup>2)</sup> 1920년 상해에서 열린 3.1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 안창호가 말했던 것처럼, “일인(日人)은 이날을 무효화하려 하였고 우리는 이날을 유효하게 하려 싸우는 형국”이 지속되었다.<sup>3)</sup> 즉, 3.1운동을 소환하여 기억하려는 조선인들과 3.1운동을 무효화하려는 식민 지배권력 사이의 기억투쟁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3.1운동을 둘러싼 이러한 기억투쟁은 1945년 일제의 패망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특히 100주년인 2019년을 전후하여 3.1운동에 대한 다양한 의미 및 기억과 관련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해방

---

미래: 기억의 정치 끝에서 기념문화를 이야기하다』, 고려대출판문화원, 2019; 임지현, 『기억 전쟁 : 가해자는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가』, 휴머니스트, 2019.

2) 박명규, 「탈식민 과정에서 ‘3.1운동’의 문화적 재구성-기억, 지식 그리고 권력」,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808쪽.

3) 「上海의 三一節」, 『독립신문』, 1920.3.4.

직후 좌우의 세력의 서로 다른 3.1운동 관련 집단기억 혹은 역사상(歷史像)과 이러한 기억의 분리를 통합하려는 노력에 대한 연구,4) 3.1운동을 동학농민혁명, 3.1운동, 광주학생운동, 4.19혁명,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계보학적 역사인식 속에 통합시키려는 흐름에 대한 고찰,5) 유관순이라는 단 한 명의 개인에게 기억과 기념이 집중되고 다른 여성 주체들을 망각하는 선택적인 젠더 중심 3.1운동 기억에 대한 비판적 검토,6)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를 넘어 세계사적 의의를 구성하려는 역사적 노력의 타당성에 대한 재고,7) 3.1운동 100주년을 전후한 극우 기독교 세력의 3.1운동 기억 전유 전략 및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념사 분석 등이 그것이다.8)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해방 이후 남한에서 각 시대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던 몇 가지 준거(반공의식, 민주주의, 젠더, 종교 등)를 중심으로 3.1운동에 대한 기억투쟁이 지속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3.1운동 기억 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3.1운동을 둘러싼 기억투쟁을 다룸에 있어서 더 이상 ‘민족’ 혹은 ‘민족주의’가 전면

- 
- 4) 임경석, 「해방직후 3.1운동 역사상의 분화」, 『사람』 63, 2018; 신주백, 「식민지기 민족운동 세력의 3.1운동 소환과 流動하는 기억: 1946년 3.1절 기념집회를 둘러싼 집단기억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사학사학보』 38, 2018.
- 5) 오제연,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3.1운동 기억’: 4.19혁명에서 6월항쟁까지」, 『동방학지』 185, 2018.
- 6) 김정인, 「젠더 관점에서 본 3.1운동의 재현」, 『여성과 역사』 31, 2019.
- 7) 한승훈,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의 불완전한 정립과 균열」, 『역사와 현실』 108, 2018.
- 8) 이지원, 「역대 한국정부의 3.1절 기념사를 통해 본 3.1운동의 표상과 전유」, 『서울과 역사』 99, 2018; 최은진, 「대한민국정부의 3·1절 기념의례와 3·1운동 표상화(1988~2017)」, 『史學研究』 131, 2018; 태지호, 「1919년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63, 2020; 김상덕, 「3.1운동의 극우기독교적 기억방식 분석 연구: 2017~2018년 ‘3.1절 구국기도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5, 2020; 이지원, 「북한 정부의 3·1운동 기념과 표상: 『로동신문』(1946~2019)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90, 2020.

에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3.1운동 연구에 대한 인식론적 토대가 1980년대 이전까지의 반공적이고 보수적인 민족주의, 1980년대 이후 민중의 주체성을 중심에 둔 민족주의, 2000년대 이후 탈민족주의로 점차 변화해왔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바일 것이다.<sup>9)</sup> 오늘날 일각에서는 민족주의가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의 가치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에 내재한 배타성 및 폐쇄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 때문에, 그리고 민족국가의 지배 논리로 전략하기 쉬운 민족주의의 위험성으로 인해, 보다 보편적인 가치로서 세계시민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인권, 평화 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의 대안에 관한 논의는 일종의 무관심이나 방기가 아니라 반성과 비판에 토대를 두어야 할 것이다. 민족주의는 붙들고 제대로 곱씹을 때, 그것이 세계화 시대의 현실에 맞지 않는 이념이므로 탈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며,<sup>10)</sup> 종족적 동질성 대신 시민적 정체성으로 공통의 귀속감을 확보하여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접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본고는 이처럼 민족 또는 민족주의라는 준거를 중심으로 3.1운동의 기억투쟁을 재검토하고 민족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능해보고자 한다.<sup>12)</sup>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고는 크게 네 가지 3.1운동의 기억들을 살펴본다. 여기서 네 가지 기억이란 일제강점기 함석헌의 3.1운동 인식,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의 3.1운동 보도, 해방 이후 남북한의 교과서에 나타난 3.1운동에 대한 공식기억 등이다. 우선 해방 이전 함석헌의 3.1운동 인식은

9) 이용기, 「3.1운동 연구의 흐름과 민족주의의 향방」, 『사학연구』 139, 2020.

10) 권정기, 「세계화의 현실과 민족주의의 미래: 대안의 모색」, 『동서철학연구』 96, 2020.

11) 이진석, 「한국에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 『민족사상』 14(1), 2020.

12) 또한 다음을 참고.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돌베개, 2019.

비판적인 ‘자기 정립’과 타자와의 ‘통합’ 및 ‘연대’라는 민족주의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기억 양식으로서 검토된다. 또한 본고는 『도쿄아사히신문』이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를 대표하는 정론지였으며, 일본 민족 내부의 개혁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이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도쿄아사히신문』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논조는 결국 일본과 조선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도쿄아사히신문』의 3.1운동 기억은 민족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도쿄아사히신문』에 담긴 3.1운동에 대한 기억은 칙락자의 입장에서 ‘민족’과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자기’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타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어서 해방 이후 남북한 교과서의 3.1운동 관련 서술을 분석함으로써, 민족주의라는 인식의 토대와 각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어떻게 공식적인 기억들이 형성되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족주의에 입각한 3.1운동 기억은 쉽게 국가권력에 의해 포섭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보다 중요하게, 해방 이후의 3.1운동 기억은 해방 이전의 두 기억 양식 가운데 후자의 방향성, 즉 무비판적인 ‘자기’ 재생산과 ‘타자’에 대한 배제에 맞닿아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3.1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민족주의적 기억들의 가능성과 한계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는 민족사적 사건으로서 3.1운동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인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sup>13)</sup>

---

13) 3.1운동에 관한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사에서 단일 주제로서는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1운동과 관련된 새로운 사료들이 다음 자료집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3.1운동에 관한 전향적인 연구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화장 소장 우남 이승만 문서 제4·5권: 3.1운동 관련문서 1·2』, 중앙일보사·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1988; 『3.1운동 독립선언서와 격문』, 국가보훈처, 2002; 윤소영 편저, 『일본 신문 한국 독립운동 기사집』 I·II, 독립기념관, 2009; 양현혜 편저, 『3.1운동 일본 언론매체 자료집: 도쿄아사히신문편』, 흥성사, 2019; 박은영 편저, 『3.1운동 일본 언론매체 자료집: 고쿠민 신문, 도요케이자이 신보, 후조신문편』, 흥성사, 2019; 김도형 편저, 『3.1운동

## II. 근대적 민족 정체성의 시원(始原)으로서 3.1운동

3.1운동은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인 한용운(韓龍雲)이 『조선독립의 서(書)』에서 웅변했듯이 조선 민중이 강요된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향해 ‘자기’를 일으킨 사건이었다. 3월에서 5월까지 총 1,542회의 시위가 있었고, 202만 여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당시 전 조선의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전 인구의 십분의 일이 운동에 동참한 셈이다. 3.1운동은 이후로도 약 1년여에 걸쳐, 한반도뿐만 아니라 간도, 중국 내륙, 시베리아, 일본, 미주 등 조선인이 거주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개되었다. 박은식(朴殷植)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5월 말 사이에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만 5,961명, 검거자가 4만 6,948명에 달했다.<sup>14)</sup> 뒤이어 발생했던 중국의 5.4운동과 비교해볼 때, 3.1운동은 그 규모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대규모 민중운동이었으며,<sup>15)</sup> 엄청난 희생을 동반한 항일 민족독립 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선인들은 스스로의 주체성과 독립의 열망을 나라 안팎에서 증명해 보였다.

3.1운동은 즉각적으로 한반도 안팎의 행위자들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도록 만들었다. 그 규모와 강도를 감안할 때, 무단통치로 조선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자부하던 조선총독부에게도 3.1운동은 대단히 갑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왜 이러한 대규모 사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하지 못했느냐는 비난이 일본 내에서 빗발쳤다.<sup>16)</sup>

---

일본 언론매체 사료집: 중앙공론·교육시론·사회급국가·아동·헌정편, 흥성사, 2019.

14)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정신문화사, 1975.

15) 3.1운동과 5.4운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임형택, 「1919년 동아시아, 3.1운동과 5.4운동」, 『대동문화연구』 66, 2009; 강수옥, 「근대 중국인의 한국 3.1운동에 대한 인식과 5.4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79, 2016.

16) 양현혜 편저, 『3.1운동 일본 언론매체 사료집: 도쿄아사히신문편』, 흥성사, 2019, 106~108쪽.

일본의 조선 지배를 지지한 친일적인 재조선 선교사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같은 인사에게도 3.1운동은 놀라운 사건이었다. 「한국민의 용기」라는 논문에서 게일은 “일찍이 나는 한국인을 유약한 민족으로 알았으나 한국 민족은 세계의 역사상 유래 없는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다”며 조선인의 주체성과 용기를 새롭게 평가하게 되었다.<sup>17)</sup>

물론 이러한 3.1운동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민족운동, 즉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의 성취와 한계를 반성하는 가운데,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며 오랜 숙고와 준비 끝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과거 의병운동이 위정척사 사상에 입각하여 유생과 농민 대중에 주축이 되어 즉각적인 무장투쟁을 시도했다면, 계몽운동은 개화지식인의 주도 하에 국민 계몽에 입각한 장기적인 실력양성 노선을 취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방향성을 견지했던 두 운동의 주도 세력은 때때로 서로 모순을 겪고 또한 충돌하기도 했다. 그 결과 민족의 항일 역량을 분산시킴으로써 일제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sup>18)</sup>

이러한 한계에 대한 자기반성을 반영하여, 3.1운동은 여러 세력과 이념 그리고 투쟁 방식을 통합하는 형태로 준비되었다. 근대적 지식인과 학생, 천도교도, 기독교도, 불교도 등 각계의 인사들이 각종 사회문화적 구분선을 초월하여 민족통일전선을 꾀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 농민들과 유생들은 이 운동을 대중화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크게 공헌했다. 부녀, 간호원, 기생 등 여성들 또한 적극적으로 거국적인 항일 독립운동의 물결에 동참했다.<sup>19)</sup> 이처럼 3.1운동은 계층, 계급, 지역, 종교, 성별의 장벽을

17) 「韓國國民의 勇氣」, 『독립신문』, 1919.9.23.

18) 김용달, 「3.1운동기 서대문 형무소 학생 수감자의 역할과 行刑」, 『한국학논총』 30, 2008, 672~673쪽.

19) 기생들은 ‘기생단’, ‘기생독립단’ 등으로 집단화하여 해주, 통영, 수원, 진주, 안성 등에서 장터의 만세운동과 연계하여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이동근, 「1910년대 ‘妓生’의 존재 양상과 3.1운동」, 『한국 민족운동사 연구』 74, 2013, 146~158쪽.

뛰어넘어 항일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대다수의 조선인이 하나가 되는 체험에 다름 아니었다.

3.1운동을 계기로 조선인들은 자신의 문화적 실체를 자각하고 민족자결의 정치적 의지를 다져갔다. 3.1운동은 국권상실의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이 국왕을 대신할 '민족'의 힘을 발견한 사건이기도 했다. '민족'은 혈연적·지리적으로 동질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민족은 인종이나 혈통이라는 물질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라는 공동의 자의의식으로부터 발생한다. 즉 '민족'이란 자기들을 공동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의식하고 정립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정신의 공동체로서의 주체인 것이다.<sup>20)</sup> 그러므로 3.1운동 전후 조선인들에게 '민족'이란 주어져있는 자명한 전제가 아니라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였다. 3.1운동의 의의는 조선인들이 이러한 의미의 민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도약을 경험한 사건이라는 데 있다. 요컨대, 3.1운동은 조선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의 시원(始原)이자 전범(典範)이었던 것이다.

### Ⅲ. 함석헌의 3.1운동 기억

3.1운동의 경험은 민족해방운동사의 주역이 되는 여러 단체나 개인들에게 강렬한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상적이고 단편적 충위를 넘어 삶 전체의 방식을 반성하게 한 이 획기적인 경험은 그들에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도록 강력하게 추동했다. '민족'에 대해 깊은 사유를 전개한

---

20) 김상봉, 「시민정치, 국민, 그리고 세계 시민」, 『시민과 세계』, 참여사회연구소, 2004, 46쪽. 이와 달리 '민족' 형성의 물질적 조건에 집중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 베네딕트 앤더슨 저, 서지원 역, 『상상된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길, 2018.

지식인 중 한 명인 함석헌(咸錫憲)에게도 일본의 한국병탄은 미증유의 파국이였다.<sup>21)</sup> 이를 두고 그는 훗날 “어려서 받은 충격 중에 가장 큰 것은 열 살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받은 것”이라고 선명하게 회상했다.<sup>22)</sup> 그것은 공포심과 비겁함 그리고 패배주의를 낳았다. 그 시절 함석헌은 “이제는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부득이 학문의 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술회했다.<sup>23)</sup>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자유가 박탈되는 경험을 통해 역설적으로 자유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사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게 자라나던 국민의 의기에 하루아침에 서리가 내렸다. 1910년 8월에 한일합병이 되었다. 나라는 망했다. 산도 그 산이요. 바다도 그 바다요. 하늘도 그 하늘, 사람도 다름없는 흰 옷 입은 그 사람이건만 이제부터 자유는 없다. 자유가 무엇인가? 열 살이 될 때까지 자유 속에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나는 이제부터 자유가 무엇인지 배워야 했다.<sup>24)</sup>

함석헌은 자유를 상실한 뒤에 비로소 자유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 바로 그의 나이 19세 때 일어난 3.1운동이었다. 평양 관립 고등보통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평양 거리에서 “목이 타 마르도록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팔을 비트는 순서를 뿌리치고 총에 칼을 꽂아 가지고 행진해 오는 일본 군인과 마주

---

21) 김상봉, 「함석헌과 씨알 철학의 이념」, 『철학연구』 10, 2009년 2월, 철학연구회; 윤상현,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초 함석헌의 주체 형성 담론의 변화: 민중, 민족, 국민 담론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12, 2013; 이상록, 「탈식민 지식인의 歐美여행 경험과 자아 인식, 그리고 민족정체성의 재구축: 1960~70년대 함석헌의 미국 유럽 여행기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22, 2011.

22) 함석헌,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함석헌 전집』 제4권, 한길사, 1983, 208쪽.

23) 위의 책.

24) 함석헌, 「나라는 망하고」, 『함석헌 전집』 제4권, 한길사, 1983, 102쪽.

행진을 해대들다가 발길로 채여 태연히 짓밟히고 일어나고” 했다.<sup>25)</sup> “지진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휩쓸고 뒤흔들고 두드려 새 기운을 내게 한” 3.1운동은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sup>26)</sup>

약 20년의 세월이 흘러 1938년 함석헌은 그의 저서 『성서로 본 한국역사』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1938년 당시 일본의 조선 식민지 통치는 나날이 가혹해져 갔으며 창씨개명을 필두로 조선의 민족정신 자체를 말살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민족사의 고난이 이렇게 정점에 이른 시기에 함석헌은 어린 학생들의 가슴 속에 꺼져가는 민족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역사서를 저술하고자 했다. 그는 여기에서 민족사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만일 고난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힘없는 자에게 퍼부어지는 저주스러운 피해나 죄에 대한 응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선 민족의 열등함을 증명하는 증거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허리를 부러트리려는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올바로 해석해내야 했다. 그렇지 못하면 민족의 불씨는 여기에서 영영 꺼져버릴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민족사의 고난의 의미를 암흑 속에 있는 동포에게 해명하기 위해 함석헌이 기댄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이 젊은 시절에 겪었던 3.1운동의 체험이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던 평범한 무명의 민중들이 자유를 위해 자신을 일으키는 것을 본 그 날의 체험을 떠올리며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요,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더라.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불러내느냐가 문제다. 속에는 다 개인의 행위와 역사의 사건으로 영향을 입지 않는, 입힐 수 없는 혼이 잠자고 있는데 그것을

---

25) 함석헌,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삼중당, 1964, 76쪽.

26) 함석헌, 위의 책, 75~76쪽.

불러내기만 하면 된다.<sup>27)</sup>

3.1운동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가 본 것은 압도적인 타자의 힘에 저항하여 그 공포를 뚫고 치솟아 오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의 숭고함이었다. 따라서 문제는 일제의 폭압과 그로 인한 수난 속에서도 여전히 파괴되지 않은 채 개개인 안에 잠자고 있는 ‘자유로운 혼’을 어떻게 깨워 불러내는가였다.

이렇게 그가 온몸으로 체험한 3.1운동의 빛은 그의 뇌리에 고난에 대한 연대를 통해 역사는 비로소 창조되어 간다는 신념을 각인시켰던 것이다. 그는 결국 타자의 고통에 연대하는 ‘스스로 의욕하는 고난’이야말로 역사 창조의 진정한 동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는 ‘창조적 수고자(受苦者)’를 역사의 참된 주인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고난의 정점에 있는 조선의 동포들을 향해 고난을 회피하려거나 타인에게 전가시키려 하지 말고, 고난에 직면하여 다 함께 연대하는 ‘수고자’가 되자고, 그리하여 ‘공의(公義)’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역사 창조의 ‘씨알’이 되자고 호소했다.<sup>28)</sup> 요컨대, 민족사의 고난이 극한에 이른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에 함석헌은 3.1운동을 조선 민족의 ‘자기 수고’와 부활을 위한 정초(定礎)의 순간으로 기억하고자 했던 것이다.

#### IV. 『도쿄아사히신문』의 3.1운동 기억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1879년 1월 오사카(大阪)에서 창간되었다. 1888년 7월 도쿄(東京)의 『메사마시신문(めさまし新聞)』을 인수하여 『도쿄

27) 함석헌, 위의 책, 76~77쪽.

28) 또한 다음을 참고. 양현혜, 「함석헌의 역사인식과 사유 체계」, 『근대 한일관계사 속의 기독교』, 이화여대 출판부, 2009.

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을 창간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1889년 1월 오사카 본사 발행 신문을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으로 개제(改題)하여 동일본과 서일본을 망라하는 양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국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다수의 특파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커다란 주목을 받았고, 포츠머스강화조약에 대한 비판적 논설로 가쓰라 다로(桂太郞) 내각을 곤경에 빠트리기도 했다. 1914년 야마모토 곤베(山本権兵衛) 내각 탄핵 및 호헌운동, 1918년에는 시베리아 출병을 선언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내각에 반대하며 쌀 소동(米騒動)의 책임을 물어 총사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1920년 전후로 『도쿄아사히신문』은 일본 사회의 보통선거권 요구, 원로의 폐지, 육해군 대신 무관제 폐지, 정당 내각제의 확립, 노동조합의 자유 등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옹호했으며,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대표하는 진보적 정론지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sup>29)</sup> 그러나 일본 파시즘 체제가 형성되던 1930년대에 들어 언론의 자유는 대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도쿄아사히신문』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으로 군부의 압력을 받기 시작했고, 1936년 2·26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문사가 습격을 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상징으로서 『도쿄아사히신문』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혹자는 이 신문이 일본사회의 양심을 대변하며 1919년 3.1운동에 대해 전향적인 보도를 했으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도쿄아사히신문』의 사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의제 설정은 결국 일본과 조선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상세히 『도쿄아사히신문』의 3.1운동 보도 논조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sup>30)</sup>

29) 임경석 편저, 『동아시아 언론매체 사전』, 논형, 2003, 916~917쪽.

30) 3.1운동에 관한 일본 언론의 인식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신국주, 「3.1운동과 일본언론의 반향」, 『3.1운동 50주년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강동진, 『일제 언론계의 한국관』, 일지사, 1982; 이규수, 「3.1운동에 대한 일본언론의 인식」, 『역사비평』 62, 2003.

『도쿄아사히신문』의 3.1운동에 대한 최초의 보도는 경성특파원의 「불온한 격문 배포」라는 제목의 1919년 3월 3일자 기사였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조선의 상황을 전했다. “국장(國葬)을 앞둔 경성은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이 많아 매우 번잡했다. 1일 아침 남대문 역 앞에서 선인(鮮人)이 조선어로 된 격문을 붙였다. 또 조선인으로서 중요한 자에게도 같은 격문이 배포되었다. 이에 경무총감부는 활동을 개시했다. 덕수궁 장례식에 참례 중이었던 고다마(児玉) 경무총감은 오전 11시 30분, 황급히 경무총감부로 돌아와 헌병대와 경찰서장을 집합시켜 대대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sup>31)</sup> 탑골공원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거행된 독립선언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경무총감부가 신속하게 사태에 대응했다는 소식만을 일본 본국에 알리는 기사였다. 또한 같은 3월 3일자 「진남포에서도 불온한 형세」라는 기사에서는 ‘불온 문자’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만세를 절규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이후 3월에서 4월까지 평양, 사천, 선천, 대구, 맹산, 영원, 철원, 부산, 대전, 정주, 연해주 우수리스크, 간도 등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을 ‘소요’라고 표현하며 꾸준히 보도했다.

그러나 『도쿄아사히신문』은 3.1운동의 발생 원인이나 조선인의 요구 사항, 각지에서 자행된 일본당국의 탄압 등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3.1운동의 진압과정에서 일본 측이 입은 피해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며 과감한 무력 진압을 정당화시키고 있었다. 예를 들어, 3월 7일 「사천, 성천에서 봉기, 주재소와 파견소 요타(燎打), 헌병이 참살되고 경관이 포로, 헌병 중위 부상입어 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평안북도 사천에 조선인 폭도 수백 명이 봉기했다. 헌병은 이를 무마하려고 애썼으나 쉽게 가라앉지 않아 할 수없이 발포하여 중상자가 발생했다. 평안남도 성천에서도 200명의 폭도가 일어났고, 그 때문에 살해된 자가

---

31) 양현혜 편저, 앞의 책, 37~38쪽.

나왔다. 또한 이 소요로 평안남도 성천 헌병 분대장 마사이케(政池學造) 중사는 4일 부상당해 5일 사망했다. 강서군 사천 헌병주재소장 상등병 이하보충원 전원이 살해되고 주재소가 불탔다. 순천 역시 위협하여 군대를 급파했다. 평안남도 중화(中和)경찰서 오자와(小澤) 서장, 다무라(田村) 부장은 상원(詳原)을 순시하는 도중 포로가 되고 상원주재소는 소각되었다. 고성 헌병과견소 역시 소각되어 평양연대가 군대를 급파했다(6일 경성 특전).<sup>32)</sup>

이처럼 조선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일본 측의 피해만을 과장되게 보도함으로써, 『도쿄아사히신문』은 일본인들에게 3.1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3월 8일 조선총독부가 「조선소요경과(朝鮮騷擾經過)」를 통해 3.1운동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 각 일간지는 일제히 속보나 특전 형태로 날짜별 상황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3월 11일 하라 다카시(原敏) 수상은 내무대신 도쿄나미 다케지로(床次竹二郎)에게 “이번 사건은 내외적으로 극히 경미한 문제로 보이게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되 외국인들로부터 가혹하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며 언론에 대한 통제를 지시했다. 그러자 사실관계 보도는 현격히 줄어들고 상황을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한 대처 방안과 관련된 논평이 주로 게재되었다.<sup>33)</sup>

논평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3.1운동의 부당성과 무력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었는데, 『도쿄아사히신문』 또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조선인] 일본의 법률에 따라 합병 전의 비참함을 면하고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또 교육, 재정, 교통 등 생활의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기를 들고 관아에 방화하고 관인(官人)을 살상하는 등 인도를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진압하기

32) 양현혜 편저, 위의 책, 56쪽.

33) 이규수, 『제국 일본의 한국 인식 그 왜곡의 역사』, 논형, 2007, 177쪽.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sup>34)</sup> 이러한 적개심과 편견을 선동하는 주장에 힘입어 4월 8일 일본 육군성은 조선에 군대 증파를 결정했다. 『도쿄아사히신문』 4월 10일자 기사는 야마가타(山形)연대 제1대대, 시바타(新發田)의 제1대대와 기관총부대, 그리고 아오모리(靑森)보병 1개 대대 등이 조선을 향해 출발했음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3.1운동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다른 일본 신문의 논조 변화와 더불어 『도쿄아사히신문』도 3.1운동을 단순히 선교사들의 ‘선동’에 조선인들이 ‘부화뇌동’하여 ‘경거망동’한 것이 아니라 총독 정치의 폭압성에서 찾으려는 논조가 대두되기 시작했다.<sup>35)</sup> 『도쿄아사히신문』은 4월 5일자 「식민지 통치의 혁신」이라는 기사에서 “요란(擾亂)의 유력한 원인이 우리 총독 정치의 결함에 있음은 유감스러우나 사실”이라는 견해를 밝혔다.<sup>36)</sup> 5월 9일에는 경제학자 후쿠다 도쿠조(福田徳三)가 “조선총독부도 이제 민정으로 변할 때가 와야만 한다”고 주장한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도쿄아사히신문』은 문관총독제를 실시하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6월 16일 「무관총독설(武官總督說)에 실망」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지난번 소요의 경우, 불철저한 무단정치의 병폐가 주된 원인의 하나라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무관정치 철폐는 조선 정치 개선의 최대 급무요 일대 요체로 문관총독제 실시를 희망해 마지않는다”고 주장했다.<sup>37)</sup> 그리고 「문관인가, 무관인가, 조선 통치의 방침」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6월 21일에서 30일까지 총 아홉 차례 연재하며 문관총독의 임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그 해 8월, 식민지 조선 통치의 개혁에 관한 논의는 『도쿄아사히신

34) 양현혜 편저, 앞의 책, 94쪽.

35) 당시 일본 신문의 논조 변화에 대해서는 박은영, 「고쿠민신문에 나타난 3.1운동」, 『일본비평』 21, 2009를 참고.

36) 양현혜 편저, 앞의 책, 95~96쪽.

37) 양현혜 편저, 앞의 책, 160쪽.

문』의 주장과 달리 결국 문무관 병용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조선총독 또한 다시 한번 무관 출신인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결정과 관련하여 『도쿄아사히신문』은 8월 29일 「일시동인(一視同仁), 사이토 총독 담화」라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는 불과 몇 달 전의 무관총독 제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 조선의 관제 개혁과 사이토 신임총독의 포부를 과장하여 선전하는 보도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군인 출신의 총독에 의한 헌병경찰통치의 병폐를 개혁하라는 자기반성과 개혁에의 요구가 일시에 자취를 감춘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 통치가 '일시동인'의 취지 아래 조선인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선정이라는 자기도취적 정당화가 반복되었다.<sup>38)</sup> 즉 3.1운동은 조선인들의 '오해(誤解)'에 의한 우발적 사건으로 그러한 오해나 편견은 '일시동인' 정책에 의해 곧 소멸될 것이라는 신임 사이토 총독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했다.

한편 1919년 12월에는 독립운동을 계획하던 조선 학생들의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보도되었다.<sup>39)</sup> 이것은 3.1운동을 이어가려는 학생들의 결의와 이에 긴장하는 일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3.1운동을 소환하여 민족독립을 도모하려는 조선인들의 열망에 대한 일본의 해결책이 '조선 보병대 정원 증가'였음을 1919년 12월 23일자 기사가 말해 주고 있었다.

지금 공표된 육군 예산에 의하면 조선 사단이 보병대에 다이쇼(大正) 9년(1920), 10년(1921) 양 년도에 걸쳐 약 2,400명 정도까지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원 증가의 이유는 올해 봄의 소요사건 발발 이래 조선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이 조선의 군대를 연대 이상으로 점차 그 수를 증가시켜 대치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불량한 무리들이 두려워서 감히 일을 벌이지 못하게 하고 또 조선인으로 하여금

38) 양현혜 편저, 앞의 책, 306~307쪽.

39) 양현혜 편저, 앞의 책, 425~426쪽.

본국의 세력을 자각하여 천박한 선동에 동요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군대를 분산 주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sup>40)</sup>

이러한 『도쿄아사히신문』의 보도와 관련하여, 과연 일본 민주·민본주의의 정론지가 3.1운동으로 분출된 조선의 민족주의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었는지 묻는다면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도쿄아사히신문』은 비록 제한적으로 무관총독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3.1운동을 ‘불량선인’의 ‘폭동’으로 간주하고 그 무력 진압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있었다. 결국 『도쿄아사히신문』은 일본 ‘민족’의 내부로는 사회개혁과 민본주의를 갈망하지만, ‘민족’ 경계선 바깥에서 자민족의 침략적 제국주의를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조선 민족주의를 억압하는 3.1운동 인식의 생산에 가담했던 것이다. 요컨대, 3.1운동은 일제강점기에 그것을 ‘폭도들의 소요’로서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일본 민족과 민족적 주체성의 시원으로서 3.1운동을 소환해 내리는 조선 민족 사이의 첨예한 기억투쟁의 장이었다.

## V. 해방 이후 남한의 3.1운동 기억

1945년 8월 15일, 한민족은 마침내 고대하던 해방을 맞이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냉전적 세계 질서 하에서 민족 전체가 3.1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해방 공간에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은 끝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곧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남과 북이 민족해방운동의

---

40) 양현혜 편저, 앞의 책, 426~427쪽.

수원(水源)이자 집합적인 동력이었던 3.1운동을 둘러싼 기억투쟁을 전개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의 표상인 3.1운동에 대한 해석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곧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이었다.<sup>41)</sup> 따라서 나라가 분단된 것처럼 3.1운동의 사회적 기억 역시 분단되기 시작했다. 남한과 북한의 정부와 민간 사회가 각각 3.1운동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해석을 만들고 수용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양측의 공식 역사서, 교과서, 언론 매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도 국가 주도의 교육 패러다임과 국민 혹은 인민 개개인의 능동적인 민족 이해의 접점에 놓여있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3.1운동의 공적 기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38도선 남측에서 발행된 초창기 교과서 중 하나로 1946년 미군정청 문교부에서 발행한 『국사교본』을 꼽을 수 있다.<sup>42)</sup> 여기에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3.1운동, 임시정부, 의사(義士)들의 활동, 한국광복군의 선전포고, 해방이라는 일련의 계보 속에서 서술하고 있었다. 이 교과서의 특징으로는 3.1운동의 원인으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강조되고, 김상옥, 나석주, 이봉창, 윤봉길 등의 임정 인사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즉, 이 1946년도 교과서는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와 미국적 가치의 영향 아래 3.1운동이 발생하고 이어서 임시정부가 민족해방운동의 주류를 지도했다는 역사인식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휴전으로부터 1년 후인 1954년, 마침내 제1차 교육과정이 정비되었다. 이에 의거해 발행된 『중등국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3.1운동 및 임시정부와 직결시키는 한편, 3.1운동을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의 결과로 서술하고, 운동의 결과 일본의 식민지배 정책이 문화통치로 전환되었다는 서사를 체계화했다. 이러한 서사는 이후 대한민국의 표준적인 3.1운동

41) 박명규, 앞의 논문, 803쪽.

42) 진단학회, 『國史教本』, 군정청교육부, 1946.

인식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sup>43)</sup>

이와 더불어 1950년대의 3.1운동 기억에는 당시의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반영되어 있었다. 반공정신과 일민주의(一民主義)가 3.1운동의 본질이라는 해석이 덧붙여진 것이었다.<sup>44)</sup> 예컨대, 대구 지역에서 열린 1951년 3.1운동 32주년 기념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평생을 오로지 조국에 바치며 3.1운동을 야기시키고 이 정신을 일관하여 항일 전쟁 으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립하신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승리를 위하여 전력을 경주할 것을 맹세한다. (중략) 3.1정신을 계승하여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멸공 성전에 돌진할 것을 맹세한다.”<sup>45)</sup> 곧 ‘3.1정신’의 핵심인 민족 단결이 반공 태세 확립과 등치되는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단결에의 요구는 “홀어지면 죽고 멍치면 산다,” “나누어지는 데서 죽고 일(-)에서 산다”라는 구호로 요약되는 일민주의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즉, 독재를 강화하려는 이승만 정부가 3.1운동의 의의를 “전 민족이 이해관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합심한” 일민주의의 사례로 소개하면서 이를 ‘3.1정신’으로 재해석했던 것이다.<sup>46)</sup>

1973년 제3차 교육과정부터는 역사교과서가 국정 체제로 전환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 체계화된 3.1운동에 관한 기본 서술 기조는 1975년의 『중학교국사』에서도 변함없이 견지된다. 3.1운동과 임시정부는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제시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우리 민족이 일본 침략에 대항하여 국가 체제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43) 정진아, 「3.1운동에 대한 남북의 분단된 집합 기억을 통일을 위한 집합 기억으로」, 『통일 인문학』 76, 2018, 39~42쪽.

44) 일민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후지이 다케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족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 8년사』, 역사비평사, 2012.

45) 「삼일절 기념 대구 시민대회 결의문」, 『대구매일신문』, 1951.3.2.

46) 최병택, 「해방 후 역사 교과서의 3.1운동 관련 서술 경향」, 『역사와 현실』 74, 2009, 267쪽.

별이기 위한 조치로서, 나라 잃은 우리 민족에게 용기를 주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뚜렷이 제시했으며 독립운동을 총지휘하게 된 것”이라며 임시정부와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강조했다.<sup>47)</sup> 비록 일민주의라는 기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3.1운동의 기억은 ‘3.1정신’이란 곧 멸공을 위한 민족의 단결로 요약되었다. ‘반공을 위해 계층적 이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권을 중심으로 뭉치자’는 인식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3.1운동 해석은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분단 현실을 정권 연장에 이용하려 했던 유신 독재세력의 정치적 지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sup>48)</sup>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분위기 속에서 발표된 제5차 교육과정 하의 『고등학교 국사(하)』는 국내외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3.1운동의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을 보다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교과서들과 구별된다. 그러나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전쟁’이라는 별도의 장을 만들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운동을 체계화하고 산발적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을 수렴한 조직으로서 민족해방운동의 ‘중핵체’라고 서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 3.1운동 이후의 민족해방운동 전체를 임시정부로 대표되는 반공 민족주의 계열 중심의 시각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해방 이래 남한의 3.1운동 기억의 냉전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7) 정진아, 앞의 논문, 41쪽.

48) 최병택, 앞의 논문, 286~287쪽.

## Ⅶ. 해방 이후 북한의 3.1운동 기억

남측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 직결시키면서 반공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3.1운동과 그 이후의 민족해방운동을 해석함과 동시에, ‘3·1정신’을 역대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억하고자 했다면, 북측은 3.1운동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북한의 공식적인 역사서술 속에서도 민족운동으로서 3.1운동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는 김일성이 3.1운동에 대하여 “일제에 대해 전 민족적 투쟁을 전개한 날이며 우리 민족이 자기의 자유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린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sup>49)</sup>

그러나 3.1운동을 기억하는 전반적인 기조는 남한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1949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펴낸 『조선민족해방투쟁사』(김승화·최창익 등 집필)와 1955년 북한교육성이 펴낸 『조선역사: 고급중학교용』은 3.1운동이 1917년 러시아혁명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는 점, 그러나 민족대표들의 안이한 방략으로 운동이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 이러한 실패가 전환점이 되어 이후의 조선 역사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3.1운동은 노동자 계급과 혁명 전위당의 지도 아래 민족해방운동이 본격화되는 기점으로서 기억되고 있는 것이었다. 1960년대 발행된 『조선력사』부터 3.1운동의 공식 명칭이 ‘3·1인민봉기’로 확정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적 역사인식에 의거하여 노동자와 농민이 역사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북한은 오늘날까지 ‘3·1인민봉기’라는 공식 명칭을 고수하고 있다.<sup>50)</sup>

49) 이수석, 「3.1운동과 남북한의 인식: 북한의 왜곡된 역사인식 바로잡아 3.1운동정신 이어받자」, 『북한』 411, 2006, 34쪽.

50) 정진아, 앞의 논문, 44-47쪽; 이지원, 「북한 정부의 3.1운동 기념과 표상: 『로동신

한편,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1981년에 출간한 북한의 공식 역사서인 『조선력사』에서는 위와 같은 기조에 더하여, 3.1운동의 전개과정에서 김일성 가계의 활동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sup>51)</sup> 이 교과서의 서술에서는 다음과 같이 김일성의 부친 김형직의 영향으로 반일운동이 고무되었다는 점, 김형직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평양에서 ‘3·1인민봉기’를 주도했다는 점, 김일성의 외조부 강돈욱과 외삼촌 강진석이 만경대의 봉기를 이끌었고 어린 나이의 김일성도 이에 동참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 선생님께서 모으신 조선국민회의 투쟁 강령이 널리 퍼지고 그의 활동이 힘 있게 벌어짐에 따라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이룩하려는 열망과 반일 기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타올랐다. ……평양 인민들의 봉기에서는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 선생님의 혁명적 영향을 받은 청년학생들과 애국적 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1인민봉기의 불길은 만경대와 칠골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만경대와 칠골 인민들은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자이신 강돈욱 선생님과 열렬한 반일혁명투사이신 강진석 선생님의 지도 밑에 남자와 여자, 늙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 시위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조선독립만세!’를 힘 있게 외치면서 평양성으로 몰밀 듯이 밀려들어 갔다. 이 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서는 여덟 살 되는 어린신 몸으로 반일시위 대렬에 참가하시어 30여리나 되는 평양 보통문밖까지 가시었다.<sup>52)</sup>

이처럼 김일성 집안의 활동에 방점을 두고 3.1운동의 전개과정을 서술하는 것을 통해 김일성 개인숭배와 최고 지도자 중심의 역사관이 3.1운동에

---

문』(1946~2019)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90, 2020, 334~336쪽.

51) 이지원, 위의 논문, 343~344쪽; 유영욱, 「북한의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역사인식 교찰」, 『군사논단』 44, 2002, 169~170쪽.

52) 립학선·서정숙·전일재·리기정, 『조선력사-고급중학교 제4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1981, 154~156쪽.

대한 공식 기억에 투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일성의 부친인 김형직은 평양창덕학교를 세운 기독교 장로이자 교육자인 강돈육의 사위였으며, 평양숭실학교를 다닌 인연으로 기독교계 인사들과 두루 교분을 맺으며 이들과 항일 비밀결사 조선국민회 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다. 즉, 김형직은 기독교계 민족운동의 틀 안에서 3.1운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교과서에서는 김형직과 기독교의 관련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sup>53)</sup>

또한 이 교과서는 3.1운동의 발상지를 평양이라고 강조한다. 평양에서 봉기의 첫 봉화가 울랐으며, 그 규모 면에서도 서울에서 수만 명이 참가한 것에 반해 평양의 시위 군중은 10여만 명에 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54)</sup> 실제로도 1919년 3월 1일 만세 시위가 일어난 7개 도시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6개의 도시가 휴전선 이북에 위치해 있었다. 33인의 민족대표 중 15명이 이북 출신이었으며, 3월 1일 북쪽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는 안주를 제외하고 모두 이들 민족대표들이 준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원산에서는 민족대표 정춘수가 3월 1일 아침까지 만세 시위를 진두지휘한 뒤 서울로 떠났다. 의주에서는 민족대표 유대여 목사가 서울에 가지 않고 직접 의주의 만세시위를 이끌었고, 선천에서도 민족대표 양전백이 만세시위를 준비했다.<sup>55)</sup> 이처럼 유독 평양과 북한 지역에서의 운동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북한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역사 서술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대칭적으로 오늘날 남한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3.1운동을 기억할 뿐, 3월 1일 당일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에서 울려 퍼진 만세의

53) 유희열, 「3.1운동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북한은 3.1운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북한』 399, 2005, 63~64쪽.

54) 이수석, 앞의 논문, 36쪽.

55) 독립기념관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조사한 ‘북한지역 3·1운동 사적지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지역 3.1운동 사적지는 총 812곳인데, 이중 황해도 158곳, 평안남도 64곳, 평안북도 151곳, 함경남도 200곳, 함경북도 81곳, 미수북경기도 75곳, 미수북강원도 83곳으로 밝혀졌다.

함성은 사실상 잊혔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분단이 3.1운동에 대한 기억의 분단으로 귀결된 것이다.<sup>56)</sup>

## VII. 나가며

지금까지 ‘민족’을 중심으로 3.1운동을 둘러싼 기억투쟁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함석헌의 3.1운동 기억에서 드러나는 바, 그에게 ‘민족’이란 종족적 동질성에 의거한 정체성의 토대라기보다는 ‘수고자’로서의 ‘자기 정립’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함석헌의 민족주의는 ‘스스로 의욕하는 수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다른 약자 혹은 타자와의 연대가 가능한 통합의 이념에 다름 아닐 것이다. 반면, 『도쿄아사히신문』은 3.1운동을 ‘불온한 폭동’으로 간주할 뿐, 그것에 내포한 조선의 민족적 자각이라는 측면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부인하려 했다. 이러한 점에서 『도쿄아사히신문』은 비록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수했지만, 그러한 보편성이 또한 민족주의라는 인식론적·존재론적 경계선 앞에서 무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사례를 함께 검토해볼 때, 전자의 기억이 함의하는 바는 피침략자의 입장에서 ‘민족’과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자기’를 비판적으로 정립한다는 방향성인 반면, 후자의 기억은 침략자의 입장에서 ‘민족’과 ‘민족주의’의 한계선을 넘지 못한 채 ‘자기’를 무비판적으로 재생산하면서 ‘타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어서 본고는 식민 지배의 종식과 함께 침략과 피침략이라는 관계 구도가 사라진 이후 남북한은 3.1운동과 ‘민족’과 ‘민족주의’를 함께 기억함으로써

---

56) 또한 한반도 북부에서의 3.1운동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김정인, 「3장 1919년 3월 1일 만세시위의 재구성」,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 기획위원회 엮음, 『3.1운동 100년 2. 사건과 목격자들』, 휴머니스트, 2019.

어떤 방향성을 지향했는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남과 북의 교과서에 나타난 3.1운동 서술을 검토를 통해 우리는 두 민족국가가 어떻게 민족주의적 기억을 지배의 논리로 손쉽게 치환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중요하게는 두 민족국가 모두 ‘민족’과 ‘민족주의’ 담론을 비판적인 ‘자기 정립’보다는 배타성과 폐쇄성, 그리고 지배권력을 강화하는 데에 결부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3.1운동으로부터 백년이 지난 오늘날, 이러한 민족주의적 기억투쟁은 종결되었다기보다 여전히 침예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오늘날 일본의 역사교과서들은 3.1운동의 원인을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로 환원하여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운동의 국제적 조건으로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운동의 외재적 요인이자 조선 민족의 내재적 요인은 아님을 감안할 때, 운동이 단지 민족자결주의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혹은 ‘고무’되어 일어났다는 일본의 3.1운동 기억은 여전히 조선 민족의 주체성을 과소평가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 우익집단의 역사 수정주의와 결합하여, 일제의 폭력성과 조선 민족의 저항을 강조하는 역사인식을 ‘도쿄재판사관,’ ‘코민테른사관,’ ‘자학사관,’ ‘암흑사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3.1운동을 둘러싼 한일 양 민족 간의 기억투쟁의 양상은 “일인(日人)은 이날을 무효화하려 하였고 우리는 이날을 유효하게 하려 싸우는” 1920년의 상황으로부터 그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한편, 남과 북 간에도 여전히 민족사적 사건으로서 3.1운동에 대한 복수의 기억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의 두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 아래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9.19 평양공동선언’에 담았다. 이 선언의 제4조 제3항은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식은 실현되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이처럼 분단된 민족의 기억으로서 3.1운동을 남과 북의 정부와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3.1운동과 민족 및 민족주의의 관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3.1운동의 기억을 탈민족화하거나, 3.1운동의 기억 속에서 민족주의보다 더욱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대 담론만을 소환하거나, 혹은 과편화되고 개별화된 기억들을 발굴하는 데에만 전념하는 것이 반드시 능사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더욱 치열하게 '민족'의 문제를 붙들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하고 재해석하고자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연대의 토대를 더 잘 고민할 수 있고, 또한 약소(弱小) 공동체와 강대(強大) 공동체의 위계를 가르는 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sup>57)</sup> 100주년 이후로도 지속될 앞으로의 3.1운동의 기억투쟁에서 손쉽게 '민족'이라는 준거가 제외되어 버리는 경향 또한 오늘날 우리가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할 선택적 기억과 망각의 조건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7)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 베네딕트 앤더슨 저, 서지원 역, 『세  
깃발 아래에서: 아나키즘과 반식민주의적 상상력』, 길, 2009; 이상록, 앞의 논문.

## 참고문헌

- 「삼일절 기념 대구 시민대회 결의문」, 『대구매일신문』, 1951.3.2.
- 「上海의 三一節」, 『독립신문』, 1920.3.4.
- 「韓國國民의 勇氣」, 『독립신문』, 1919.9.23.
- 강동진, 『일제 언론계의 한국관』, 일지사, 1982.
- 강수옥, 「근대 중국인의 한국 3.1운동에 대한 인식과 5·4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79, 2016.
- 국가보훈처, 『3.1운동 독립선언서와 격문』, 국가보훈처, 2002.
-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돌베개, 2019.
- 권정기, 「세계화의 현실과 민족주의의 미래: 대안의 모색」, 『동서철학연구』 96, 2020.
- 김도형 편저, 『3.1운동 일본 언론매체 사료집: 중앙공론·교육시론·사회급국가·아동·현정편』, 홍성사, 2019.
- 김상덕, 「3.1운동의 극우기독교적 기억방식 분석 연구: 2017~2018년 ‘3.1절 구국기도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5, 2020.
- 김상봉, 「시민정치, 국민, 그리고 세계 시민」, 『시민과 세계』, 참여사회연구소, 2004.
- 김상봉, 「함석헌과 씨알 철학의 이념」, 『철학연구』 제10호, 철학연구회, 2009년 2월.
- 김용달, 「3.1운동기 서대문 형무소 학생 수감자의 역할과 行刑」, 『한국학논총』 30, 2008.
- 김정인, 「젠더 관점에서 본 3.1운동의 재현」, 『여성과 역사』 31, 2019.
- 림학선·서정숙·전일재·리기정, 『조선력사-고급중학교 제4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1981.
- 문화사학회 엮음, 『기억은 역사를 어떻게 재현하는가』, 한울, 2017.
- 박명규, 「탈식민 과정에서 ‘3.1운동’의 문화적 재구성-기억, 지식 그리고 권력」,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 박은영 편저, 『3.1운동 일본 언론매체 사료집: 고쿠민 신문, 도요케자이 신보, 후조선문편』, 홍성사, 2019.

- 박은영, 「고쿠민신문에 나타난 3.1운동」, 『일본비평』 21, 2009.
- 베네딕트 앤더슨 저, 서지원 역, 『상상된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길, 2018.
- 베네딕트 앤더슨 저, 서지원 역, 『세 깃발 아래에서: 아나키즘과 반식민주의적 상상력』, 길, 2009.
- 신국주, 「3.1운동과 일본언론의 반향」, 『3.1운동 50주년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 신주백, 「식민지기 민족운동 세력의 3.1운동 소환과 流動하는 기억: 1946년 3.1절 기념집회를 둘러싼 집단기억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사학사학보』 38, 2018.
- 양현혜 편저, 『3.1운동 일본 언론매체 사료집: 도쿄아사히신문편』, 흥성사, 2019.
- 양현혜, 「함석헌의 역사인식과 사유 체계」, 『근대 한일관계사 속의 기독교』, 이화여대 출판부, 2009.
- 오제연,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3.1운동 기억: 4.19혁명에서 6월항쟁까지」, 『동방학지』 185, 2018.
- 유영옥, 「북한의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역사인식 교찰」, 『군사논단』 44, 2002.
- 유호열, 「3.1운동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북한은 3.1운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북한』 399, 2005.
- 윤상현,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초 함석헌의 주체 형성 담론의 변화: 민중, 민족, 국민 담론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12, 2013.
- 윤소영 편저, 『일본 신문 한국 독립 운동 기사집』 I-II, 독립기념관, 2009.
- 이규수, 「3.1운동에 대한 일본언론의 인식」, 『역사비평』 62, 2003.
- 이규수, 『제국 일본의 한국 인식 그 왜곡의 역사』, 논형, 2007.
- 이동근, 「1910년대 ‘妓生’의 존재 양상과 3.1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4, 2013.
- 이상록, 「탈식민 지식인의 歐美여행 경험과 자아 인식, 그리고 민족정체성의 재구축: 1960~70년대 함석헌의 미국 유럽 여행기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22, 2011.
- 이수석, 「3.1운동과 남북한의 인식: 북한의 왜곡된 역사인식 바로잡아 3.1운동정

- 신 이어받자, 『북한』 411, 2006.
- 이용기, 「3.1운동 연구의 흐름과 민족주의의 향방」, 『사학연구』 139, 2020.
- 이지원, 「북한 정부의 3·1운동 기념과 표상: 『로동신문』(1946~2019)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90, 2020.
- 이지원, 「역대 한국정부의 3.1절 기념사를 통해 본 3.1운동의 표상과 전유」, 『서울과 역사』 99, 2018.
- 이진석, 「한국에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 『민족사상』 14(1), 2020.
- 임경석 편저, 『동아시아 언론매체 사전』, 논형, 2003.
- 임경석, 「해방직후 3.1운동 역사상의 분화」, 『사림』 63, 2018.
- 임지현, 『기억 전쟁 : 가해자는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가』, 휴머니스트, 2019.
- 임형택, 「1919년 동아시아, 3.1운동과 5.4운동」, 『대동문화연구』 66, 2009.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억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5.
- 정진아, 「3.1운동에 대한 남북의 분단된 집합 기억을 통일을 위한 집합 기억으로」, 『통일 인문학』 76, 2018.
- 중앙일보사·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이화장 소장 우남 이승만 문서 제 4·5권: 3.1운동 관련문서 1·2』, 중앙일보사·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1988.
- 최병택, 「해방 후 역사 교과서의 3.1운동 관련 서술 경향」, 『역사와 현실』 74, 2009.
- 최은진, 「대한민국정부의 3·1절 기념의례와 3·1운동 표상화(1988~2017)」, 『史學研究』 131, 2018.
- 최호근, 『기념의 미래: 기억의 정치 끝에서 기념문화를 이야기하다』, 고려대출판문화원, 2019.
- 태지호, 「1919년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63, 2020.
-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엮음, 『3.1운동 100년 2. 사건과 목격자들』, 휴머니스트, 2019.
- 한승훈,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의 불완전한 정립과 균열」, 『역사와 현실』 108, 2018.

- 함석헌, 「나라는 망하고」, 『함석헌 전집』 제4권, 한길사, 1983.
- 함석헌,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함석헌 전집』 제4권, 한길사, 1983.
- 함석헌,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삼중당, 1964.
- 후지이 다케시, 『과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족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 8년사』, 역사비평사, 2012.
-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정신문화사, 1975.

---

REVISITING “NATION” AND “NATIONALISM” AS A  
FRAMEWORK OF REFERENCE FOR EXAMINING THE MEMORY  
STRUGGLE OVER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YANG HYUNHYE (YANG, HYUN HYE)

Celebrating the 100<sup>th</sup> anniversary of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recent scholarship has been focusing on the diverse “memories” of the movement, emphasizing their different frameworks of reference such as the Cold War ideology, democratization, gender politics, Christian values, and so on. However, the existing literature has seldom examined the March 1<sup>st</sup> memories from the perspectives of “nation” or “nationalism.” It might not be so surprising, given that the epistemic foundation of the March 1<sup>st</sup> studies in South Korea has been changed from anti-communist and conservative nationalism in the pre-1980s to more popular democratic or “minjung”-based nationalism in the 1980s and 1990s and to post-nationalism after the 2000s. Nevertheless, rather than simply neglecting and rejecting the importance of nation/nationalism in interpreting plural March 1<sup>st</sup> memories, this article argues that critically reviewing it can be more productive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broader and ongoing possibilities as well as limits of nation/nationalism. To support this argument, this article analyzes four different memories and meanings of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Ham Seok-heon’s understandings of the movement in the colonial years; Tokyo

Asahi Shimbun's editorial reports on the movement; and the post-colonial history textbooks in South and North Korea. In so doing, this article concludes that while continuing to “post-nationalize” the March 1<sup>st</sup> memories, engage with and rely on more “universal” values that seems more inclusive than nationalism, or mine hitherto unspoken individual or fragmented memories, we should ponder upon whether or not and why we should exclude nation/nationalism in our future-oriented discussions on various meanings of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and what the potentials and costs would be.

Key Words : March 1<sup>st</sup> Movement, Memory struggle, Nation and nationalism, Ham Seok-heon, Tokyo Asahi Shimbun, History textbooks in South and North Korea